

토론회

# 소비자는 저물가를 체감하고 있는가?

-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의 물가 진단 및 대책 마련 -

---

◎ 일 시 : 2016년 11월 8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사회공헌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사회공헌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Korea National Council Consumer Organizations



# [토론회] 소비자는 저물가를 체감하고 있는가?

## -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의 물가 진단 및 대책 마련 -

◇ 일시 : 2016년 11월 8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지하 1층)

◇ 공동주최 : 국회사회공헌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시 간	내 용	발제자 및 토론자
14:00~14:05	사회	임은경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4:05~14:10	국민의례	
14:10~14:20	개회사	조경태 대표의원 (국회사회공헌포럼) 주경순 부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4:20~14:25	축사	참석 국회의원
14:25~14:30	내빈소개	김연화 공동위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위원회)
14:30~15:00	발제	1. 최근 서민물가 동향 (식료품, 공공요금, 전월세 중심으로) - 조영주 회계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2. 체감과 다른 저물가 현상에 대한 논의 - 백다미 선임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15:00~15:40	지정토론	- 좌장: 이정희 교수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 토론: 최재섭 교수 (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과) 천규승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강성경 사무총장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이재현 기자 (식품음료신문) 김순복 사무처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15:40~15:55	전체토론	
16:00	폐회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회공헌포럼 대표의원 조경태입니다.



조경태

먼저, 저희 국회 사회공헌포럼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한『소비자는 저물가를 체감하고 있는가?』 토론회에 참석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이정희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조영주 회계사님, 백다미 선임연구원님, 토론을 맡아주신 최재섭 교수님, 천규승 전문위원님, 강성경 사무총장님, 이재현 기자님, 김순복 사무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 주민들과 전국 각지의 시민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바로 “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서민들의 하소연입니다.

“월세도 비싸고, 과일값도 비싸고, 생선값도 비싸고, 생필품 값도 비싸서 월급 빼고 안 오른게 없다”라는 푸념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한 번씩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체감물가와 달리, 통계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되려, 경제학계 일각에서는 경기침체와 장기적 물가하락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식견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표상 물가와 체감물가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서민물가 안정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는 실제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 의류, 공공요금, 전월세 등의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소비자는 저물가를 체감하고 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길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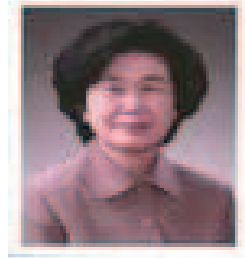
2016년 11월 8일

국회 사회공헌포럼 대표의원 조경태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저물가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하나 식료품, 의류, 생활필수품, 공공요금,  
통신비, 전월세 등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입니다.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

지난해 말 소주 업체들이 가격을 연달아  
인상했고, 올해는 두부, 과자 등 식료품 가격이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으며,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의 인상도 이어  
져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습니다.

최근에는 혼란스러운 시국을 틈타 맥주, 탄산음료 또한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생활필수품과 식료품  
소비지출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저성장 기조에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서민층과 직결되어 있는 품  
목의 경우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기업 및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조영주 회계사가 “최근 서  
민물가 동향”, 현대경제연구원 백다미 선임연구원이 “체감과 다른 저물가 현상에  
대한 논의”를 발표해 주시고,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남서울대학  
교 최재섭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천규승 전문위원,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강성경  
사무총장, 식품음료신문 이재현 기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이 참여  
하여 서민물가안정의 중요성과 대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주셔서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물가의 안정화  
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서민물가안정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주경순



---

# 자료집 목차

---

## □ 주제발표

### 1. 최근 서민물가 동향(식료품, 공공요금, 전월세 중심으로)

조영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회계사) ..... 1

### 2. 체감과 다른 저물가 현상에 대한 논의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원) ..... 19

## □ 토론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과 교수) ..... 31

천규승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 33

강성경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사무총장) ..... 35

이재현 (식품음료신문 기자) ..... 37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 39

---



**[주제발표 I]**

# **최근 서민물가 동향**

**(식료품, 공공요금, 전월세 중심으로)**

**조영주 회계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토론회] “소비자는 저물가를 체감하고 있는가?”

-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의 물가 진단 및 대책 마련 -

# 최근 서민물가 동향

- 식료품, 공공요금, 전월세 등  
다소비품목을 중심으로 -

2016. 11. 8.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 차 례

- I 서민물가안정의 중요성
- II 최근 식료품 및 생필품 물가동향
- III 최근 공공요금 동향
- IV 최근 전월세 동향
- V 결론 및 제언

# I. 서민물가안정의 중요성

## 서민물가안정 왜 중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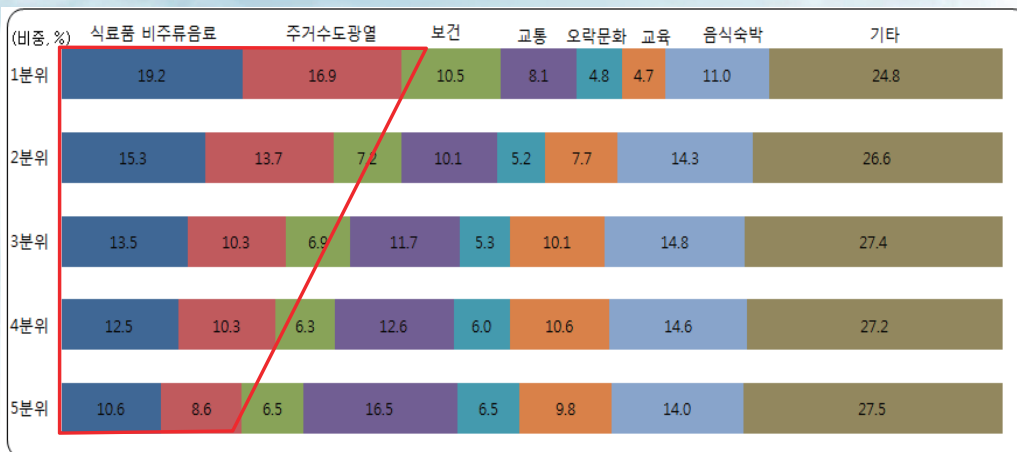
### 서민생활 안정, 소득 재분배 효과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이지만 식료품, 의류, 생활필수품, 공공요금, 통신비, 전월세 등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임.
-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필품 가격상승에 의해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 소득계층별 분배문제가 악화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음.
- 소득계층별 분배문제의 개선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물가안정이 중요
- 저소득층일수록 고소득층에 비해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 등 생활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비중이 높고 그 차이가 현저하게 큼.

# I. 서민물가안정의 중요성

##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 등 필수품 지출 비중이 커

###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비중(2016년 2/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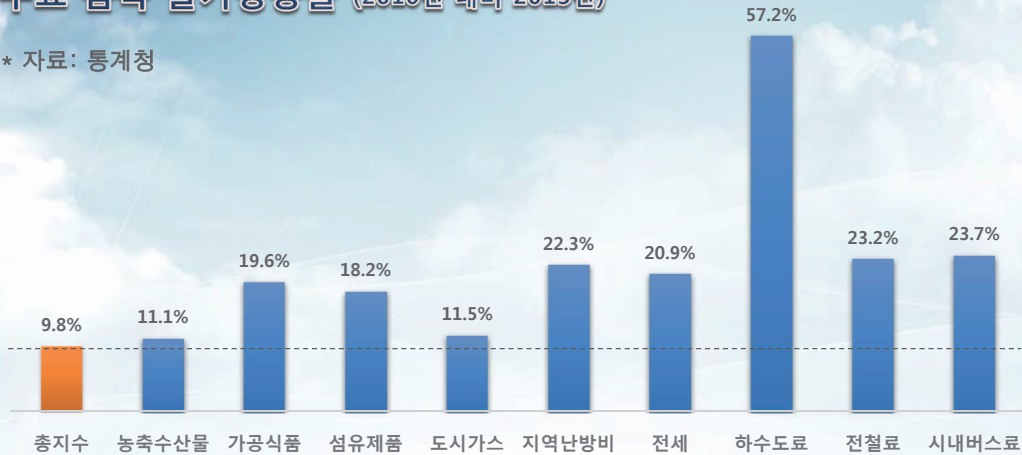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2016년 2/4분기 가계동향 보도자료

# I. 서민물가안정의 중요성

## 서민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상승률

### 주요 품목 물가상승률 (2010년 대비 2015년)

\* 자료: 통계청



‘10년 대비 ‘15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9.8% 올랐으나, 공공요금인 하수도료는 57.2% 올랐고, 시내버스료, 전철료, 지역난방비가 22.3%~23.7% 올랐음. 서민과 밀접하거나 필수품인 전세, 가공식품, 섬유제품(의류 등), 도시가스, 농축수산물 역시 10% 이상 올랐음.

# I. 서민물가안정의 중요성

## 정부지표와 체감물가의 괴리

### 소비자들의 물가인식, 정부통계보다 높아

-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7월 0.7%, 8월 0.4%, 9월 1.2%, 생활물가지수는 2016년 7월 0.0%, 8월 -0.6%, 9월 0.6%임.
- 정부에서는 저물가를 걱정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월급빠고 다 오른다”고 함.
- 실제로 한국은행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조사하는 물가인식은 9월 2.4%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상승률(1.2%)에 비해 1.2%p 더 높음. 이는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임.





# I. 서민물가안정의 중요성

## 체감물가는 높아

### 2016년 서울시민의 관심사는 '체감 생활물가 상승'



- 서울연구원에서 2016년 서울시민 10대 경제 관심사를 조사한 결과, '체감 생활물가 상승'이 중요·관심도 1순위로 나타났으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체감 생활물가 상승'이 전 연령층에서 상위권을 차지함.

# II. 최근 식료품 및 생필품 물가동향

## 주요 다소비품목 가격 인상 커

### 2015년 생활필수품 가격변동 현황 (2014년 대비)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생활필수품 및 가공식품 34개 품목의 소비자가격을 전년과 비교함.
- ✓ 사이다 9.0%, 콜라 6.0%, 냉동만두 5.2%, 과자(파이) 3.5%, 햄 3.3%, 분유 3.0% 인상
- ✓ 주요 다소비 품목에서 가격 변동이 컸던 것으로 조사됨.

\*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 Ⅱ. 최근 식료품 및 생필품 물가동향

### 두부 가격 인상

#### '실적악화' 풀무원 4년만에 두부가격 기습인상

두부류 36개 제품가격 평균 6.4% 인상...해외부진·화물차주 파업 등 실적부진, 가격인상으로 만회 시도

(2016년 1월)



#### 소비자단체 "풀무원, 콩값 떨어졌는데 두부값 인상...실적부진 소비자에 전가"

<표1> 콩(백태·국산) 도매가격 변동 추이

(단위: 원/kg)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1~2월)
백태(국산)가격	4,881	6,737	5,560	6,030	4,064	3,985	4,256
전년대비증감률	33.0%	38.0%	-17.5%	8.5%	-32.6%	-1.9%	6.8%

\*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보도자료(2016.02.22)

- 콩가격은 2011년 대비 2015년 40.8% 가격이 하락했음.
- 풀무원식품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원재료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매출총이익은 매년 증가해 왔으나, 영업이익은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 경영관리로 인한 실적 부진을 제품 가격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임.

## Ⅱ. 최근 식료품 및 생필품 물가동향

### 라면 가격 인상

-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라면이 프리미엄 전략을 앞세운 업계의 마케팅에 밀려 기존 라면가격보다 2배가량 인상된 가격으로 출시하여 서민들의 부담이 심화됨.
- 농심의 맛짬뽕과 짜왕, 오뚜기의 진짬뽕, 삼양식품의 갯짬뽕 등은 기존 라면보다 98%~150% 비쌌.



\*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보도자료(2016.03.10)

## Ⅱ. 최근 식료품 및 생필품 물가동향

### 과자 가격 인상

#### 과자 최고 16.7%나 올라-롯데제과 일부 제품 가격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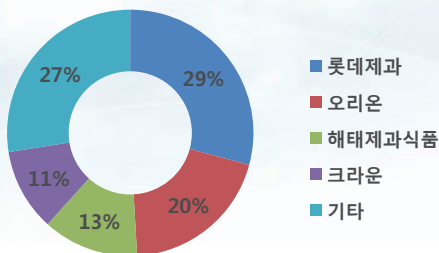
삼양식품, 수익성 개선 위해 '과자값 인상'

(2016년 3월~7월)

크라운제과, 빅파이 등 14개 제품 가격 올리고 중량 낮춘다  
해태제과 9개 과자값, 평균 8.2% 올라

농심, 새우깡·양파링 '국민 과자' 가격 인상

#### 제과시장 점유율(2015년)



\* 자료: 해태제과식품 사업보고서

✓ 올해 롯데제과, 삼양식품,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농심에서 주요 과자가격을 인상하였음.



## Ⅱ. 최근 식료품 및 생필품 물가동향

###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

#### 과자 이어 아이스크림까지 식품가격 줄줄이 인상

(2016년 5월)

#### 최근 가격 오른 아이스크림 제품

업체	제품명	가격
해태제과	부라보콘 4종	1200 → 1300원
빙그레	붕어싸만코	1200 → 1300원
	투게더	6000 → 6500원
롯데푸드	구구콘	1200 → 1300원
	빠빠코	700 → 800원
롯데제과	월드콘·설레임	1200 → 1300원



✓ 해태제과, 빙그레,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 아이스크림 업계 역시 인기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였음.



## Ⅱ. 최근 식료품 및 생필품 물가동향

### 생리대 가격 인상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꼼수' 인상

"생리대 가격 또 올려?"...뿔난 소비자단체, 인상 철회 요구

(2016년 6월)

돈 없어 휴지로..소녀들 생리대 인권



- 지난 6월 유한킴벌리가 신(리뉴얼)제품을 출시하면서 생리대의 가격을 인상하였음. 그러나, 원재료인 펄프와 부직포의 가격은 하락했고,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가격인상에 의문이 제기됨.
- 생리대는 경제력과 상관없이 여성이라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품으로 사회적인 문제로도 확산되었음.

## Ⅱ. 최근 식료품 및 생필품 물가동향

### 맥주, 음료 가격 인상

오비맥주 맥주값 인상 '논란'... 맛도 없는데 값만 올려?

(2016년 11월)

오비맥주, 평균 6% 가격 인상 ...도미노 '우려'

소주·과자 이어 맥주·콜라도 가격 인상...서민 부담 '가중'

콜라·환타 가격 오른다...코카콜라, 2년 만에 인상



- 최근 맥주, 음료의 가격이 인상되었음. 11월 1일부터 오비맥주는 '카스'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 인상, 코카콜라음료 역시 '코카콜라', '환타'의 가격을 약 5% 인상하였음.
- 오비맥주는 각종 비용 증가, 코카콜라음료는 유가와 원당가격 인상, 판매관리비 상승 등을 주요 인상요인으로 꼽았으나, 가격인상이 정말 불가피했던 것인지, 혼란스러운 틈을 탄 꼼수 가격인상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됨.

## Ⅱ. 최근 식료품 및 생필품 물가동향

식료품 및 생필품 유통마진 30%대로 높아

### 대형마트 식료품/생필품 유통마진 분석(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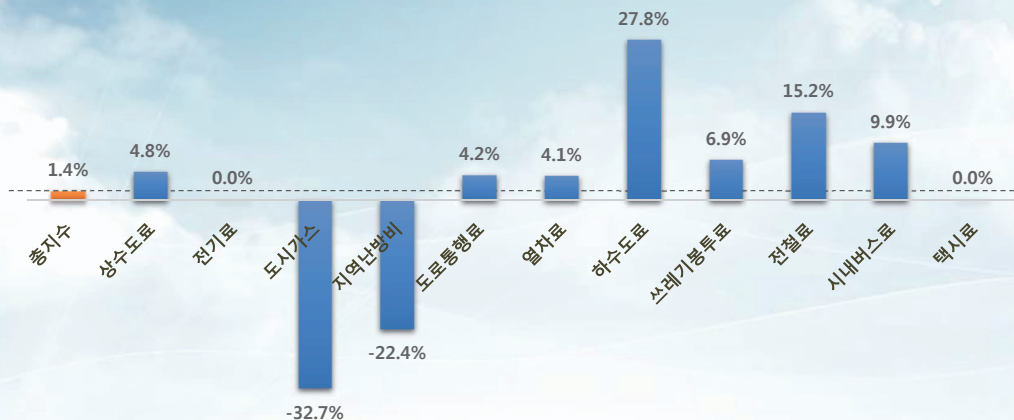
품목	유통 마진율(%)
맛김	64.2%
식용유	49.4%
밀가루	49.2%
설탕	47.7%
아이스크림	43.1%
어묵	41.6%
우유	34.6%
오렌지주스	29.1%
분유	28.1%
사이다	21.7%
콜라	14.8%
스낵과자	11.6%
라면	9.5%
초코파이	2.0%
평균(14개품목)	31.9%

- ✓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판매가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가격조사 결과) 과 제조업체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한 출고가를 근거로 다소비 가공식품 14개 품목의 대형마트 유통마진을 분석하였음.
- ✓ 2014년 대형마트 유통마진은 평균 31.9%로 추정됨.
- ✓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서민들이 주로 구매하는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은 최소 마진 책정 필요.

## Ⅲ. 최근 공공요금 동향

주요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 높아

### 주요 공공요금 등락률 (2014년 7월 대비 2016년 7월)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대에 머물지만 일부 공공요금 상승률은 이를 크게 웃돌고 있음. '14년 7월 대비 하수도료 27.8%, 전철료 15.2%, 시내버스료 9.9% 인상됨.

\* 하수도 요금 현실화, 2015년 대중교통요금 인상

\*\* 도시가스, 지역난방비는 국제유가 하락이 반영되며 큰 폭 하락



## Ⅲ. 최근 공공요금 동향

###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현황



서울 지하철 200원·버스 150원 인상

경기인천 버스요금 인상안 확정...150원 오른다

광주 시내버스·지하철요금 5년 만에 인상

김천시 시내·좌석버스 요금 100~200원씩 인상

영주시, 6월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

문경시, 5월부터 일반·좌석버스 요금 인상

- 지난해 6월 수도권 버스, 지하철 요금이 일제히 인상되었음. 경기도와 서울·인천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지하철 요금을 200원 올렸음.
- 올해부터는 울산, 경북, 광주 등에서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었음.

## Ⅲ. 최근 공공요금 동향

### 상·하수도 요금 인상 현황

서울 하수도 요금 3년간 33% 오른다

인천시 하수도요금 19% 인상

포천시, 5월 사용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속초시, 상하수도요금 인상

충주시, 상수도요금 인상·감면대상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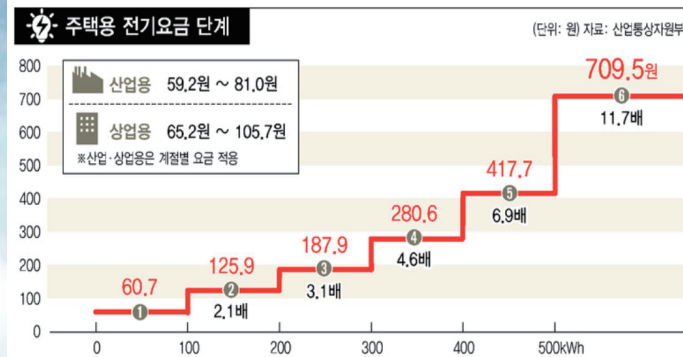
진주시 상수도요금 8월부터 단계별 인상 추진



- 2014년 정부가 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90% 수준에 맞출 수 있게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도록 권고함. 올해 서울시, 인천시, 포천시, 속초시 등 지자체별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음.
-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4.8% 인상한다고 밝혔음.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4대강 부채상환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Ⅲ. 최근 공공요금 동향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이슈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으로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와 최고 간의 누진율은 11.7배에 달함.
- 그러나 누진제는 유독 주택용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올여름 폭염에 가정의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어 왔음.
- 일부 소비자들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 중에 있음.

## Ⅲ. 최근 공공요금 동향

### 도시가스요금, 택시요금 인상 예정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6.1% 인상**

**지역난방공사, 열요금 4.73%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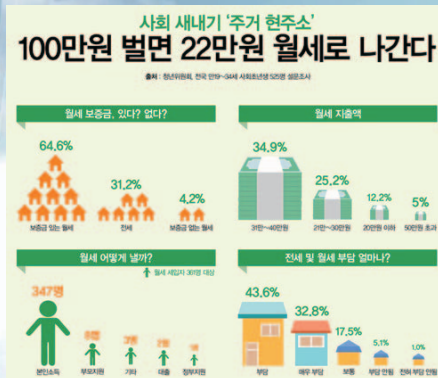
**맥주·도시가스 이어 택시요금도?...물가 인상 '도미노'**



- 도시가스 요금은 11월 1일부터 평균 6.1% 인상되었고,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 요금도 4.7% 인상되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5월에는 요금을 인하했고 7,9월에는 요금이 동결되었으며, 11월에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누적 인상요인이 반영되었다는 설명이지만, 서민들은 겨울만 되면 가격을 올리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반응임.
- 최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택시업계의 택시요금 인상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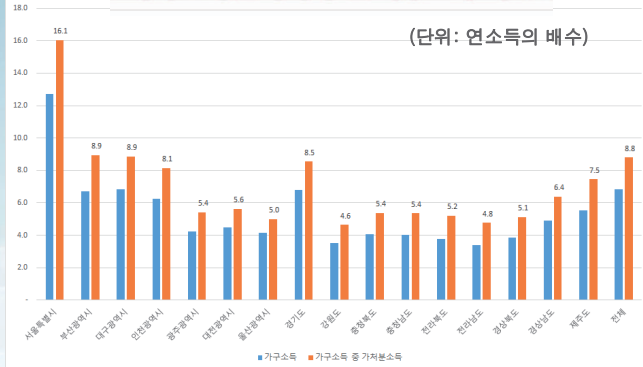
## IV. 최근 전월세 동향

###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커



\* 자료: 머니S, 청년위원회

### 아파트 중간가격과 연 가구소득 비교



\*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사회 새내기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만원을 벌면 22만원은 월세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6.4%가 전월세가 부담된다고 응답함.
- 경실련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가구 소득을 모두 모아도 16년이 걸리며,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주거안정보호책(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함.

## IV. 최근 전월세 동향

###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 ● 평균 매매가격

(단위 : 만원)

구 분	전국				서울				수도권			
	종합	아파트	단독	연립	종합	아파트	단독	연립	종합	아파트	단독	연립
2011.12	26,092	26,909	29,131	15,200	48,576	53,900	62,245	24,009	35,833	37,101	50,713	17,781
2012.12	25,736	26,077	30,181	15,142	46,987	50,780	63,841	23,766	34,674	35,103	52,111	17,546
2013.12	25,420	26,160	29,567	15,458	44,074	48,375	63,460	23,188	32,780	33,598	51,409	17,480
2014.12	26,126	26,949	30,334	15,638	44,670	49,177	64,180	23,268	33,338	34,284	52,028	17,563
2015.12	27,773	28,919	31,578	16,210	47,205	52,475	66,874	24,066	35,198	36,579	53,729	18,091
2016.07	29,882	30,879	33,835	17,268	50,611	56,829	69,836	25,336	37,550	39,180	55,902	19,239
상승률	14.53%	14.75%	16.15%	13.60%	4.19%	5.43%	12.19%	5.53%	4.79%	5.60%	10.23%	8.20%

#### ● 평균 전세가격

(단위 : 만원)

구 분	전국				서울				수도권			
	종합	아파트	단독	연립	종합	아파트	단독	연립	종합	아파트	단독	연립
2011.12	13,616	14,959	12,035	8,496	22,783	26,371	23,795	12,818	17,451	18,850	20,466	9,568
2012.12	14,156	15,526	12,662	8,781	23,414	27,043	24,693	13,131	17,917	19,310	21,249	9,811
2013.12	15,297	17,117	12,856	9,551	24,662	29,368	25,912	13,801	19,031	21,021	21,694	10,521
2014.12	16,449	18,563	13,430	10,081	26,478	31,864	26,998	14,597	20,559	22,982	22,567	11,105
2015.12	18,454	21,179	14,101	10,904	30,349	37,471	28,841	15,957	23,492	26,868	23,765	12,052
2016.07	20,328	23,063	15,403	11,765	33,196	41,157	30,570	17,198	25,713	29,423	25,015	13,049
상승률	49.29%	54.17%	27.99%	38.49%	45.70%	56.07%	28.47%	34.17%	47.34%	56.09%	22.22%	36.38%
상승액	6,712	8,103	3,368	3,270	10,412	14,786	6,775	4,379	8,262	10,572	4,549	3,481



## IV. 최근 전월세 동향

###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단위 : 만원)

구 분	전국				서울				수도권			
	종합	아파트	단독	연립	종합	아파트	단독	연립	종합	아파트	단독	연립
전세가 상승액	6,712	8,103	3,368	3,270	10,412	14,786	6,775	4,379	8,262	10,572	4,549	3,481
월평균 흑자액	약 85											
부담 가능액	약 4,675											

\* 자료: KB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청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 주택 매매가격 변동에 비해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2016년 Ⅳ분기)에 따르면 월평균 흑자액은 약 85만원으로 나타나 흑자액을 모두 전세자금 목적으로 사용해도 증가되는 전세가격을 부담하기 어려움.
- 2011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년 7개월간 흑자액을 모두 모았을 경우 약 4,675만원이지만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세 상승액은 약 6,712만원, 서울지역의 경우 약 10,412만원 상승해 자기소득으로 상승하는 전세가격을 부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IV. 최근 전월세 동향

###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

#### 월세액 추정(월세보증금 1억원 가정)

(단위 : 만원)

구 분	전국		서울		수도권	
	종합	아파트	종합	아파트	종합	아파트
2011.12	27.4	33.1	87.4	96.9	54.6	57.5
2012.12	30.5	34.5	87.2	95.2	56.1	57.4
2013.12	36.6	40.3	89.2	98.5	59.5	60.6
2014.12	41.4	42.8	94.7	100.2	65.1	64.9
2015.12	49.3	49.2	104.6	108.9	74.0	69.9
2016.07	58.5	53.3	116.0	116.8	82.5	76.1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추정(보증금 1억원 제외한 금액 대출 가정)

(단위 : 만원)

구 분	전국		서울		수도권	
	종합	아파트	종합	아파트	종합	아파트
2016.07	26.1	33.0	58.6	78.7	39.7	49.0

## IV. 최근 전월세 동향

###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

#### ● 월세액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전국		서울		수도권	
	종합	아파트	종합	아파트	종합	아파트
월세 추정액	58.5	53.3	116.0	116.8	82.5	76.1
대출이자 추정액	26.1	33.0	58.6	78.7	39.7	49.0
차이	32.4	20.4	57.4	38.2	42.8	27.0

- 월세부담액 비교를 위해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함.
  - ✓ 월세보증금은 1억원,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이 월세로 전환됨을 가정.
  - ✓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중 1억원은 자기부담, 차액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함을 가정.
- 월세와 전세자금대출을 비교할 경우 월세의 경우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보다 전국 평균 약 32.4만원, 서울 평균 약 57.4만원, 수도권 평균 약 42.8만원 정도 부담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음.
-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었을 경우 세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V. 결론 및 제언

### 식료품 및 생필품 가격 지속 상승

#### 저유가·저물가에도 식품 등 생필품 가격은 지속 상승해

- 국제 원자재가격이 하락해 왔고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원자재가격 하락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2013년 말~2014년 당시 원료가격 인상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했던 업체들은 가격인하에는 인색한 상황이며, 독과점 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잦은 가격인상을 시도하고 있음.

#### 유통업계의 혁신적인 대책 필요해

- 대형유통업체의 유통마진과 독과점에 대한 문제 지적이 줄곧 있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유통업계는 양적확대로 주변 상권을 미워낼 것이 아니라 유통비용을 줄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조업체와 소비자와 공유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특히,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서민들이 주로 구매하는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은 최소 마진이 필요함.

## V. 결론 및 제언

### 요금현실화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 공공요금은 투명성, 공익성, 형평성 전제되어야

- 최근 공공요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원가에 대한 요금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음.
- 공공요금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준조세 성격을 띄며, 서민들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요금 인상시 다른 물가 상승보다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가 산정과정의 투명하고 투명해야 함. 또한 공익성,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요금 인상 시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구해야 함.

## V. 결론 및 제언

###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하고 주거복지 실현되어야

- 주택 임차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해 왔음.
- 가계 흑자액 모두를 전세자금 목적으로만 사용해도 상승하는 전세가격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저금리 시대와 맞물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음.
- 현재 주택시장은 공급자(건설업계)와 임대인 위주의 시장으로, 현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주거약자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까지 배려하는 주거정책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



## V. 결론 및 제언

### 정부의 역할!!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만들고,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 대부분의 우리 공산품 가격은 현재 독과점 시장구조 하에서 결정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를 경쟁구조로 만들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에 도움을 주어야 함.
- 독과점 시장과 가격담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규제 필요.
  - 솜방망이 처벌로 기업이 담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함.
-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높이거나 환율을 낮추는 거시경제정책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쟁시장 유도, 물류체계의 유통구조를 개선시키는 미시적 정책 또한 중요함.

## V. 결론 및 제언

### 기업의 역할!!

원자재가격 하락 혜택을 소비자와 공유하고,  
이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격인하에 동참해야

- 독과점 시장에서 가격 선도와 동조화 현상(묵시적 가격담합)이 만연해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 암묵적 가격담합 자제하고 공정한 경쟁 필요
- 저물가·저성장 기조에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이제는 기업이 원자재가격 하락 혜택을 소비자와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진정성 있게 가격인하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임.
- 소비자 중심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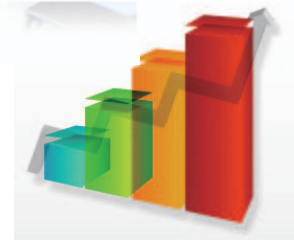
**[주제발표 II]**

# **체감과 다른 저물가 현상에 대한 논의**

**백다미 선임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 체감과 다른 저물가 현상에 대한 논의



## 1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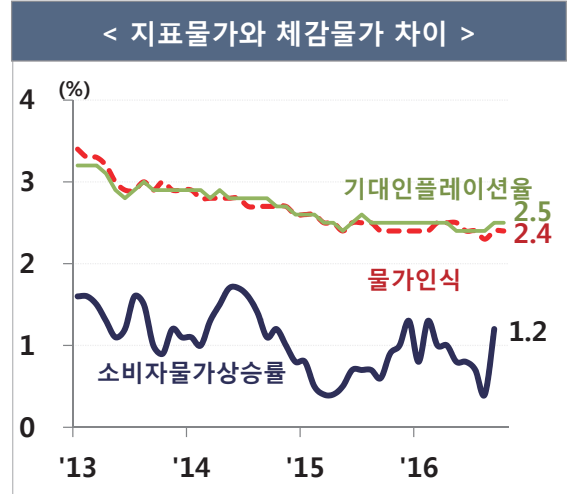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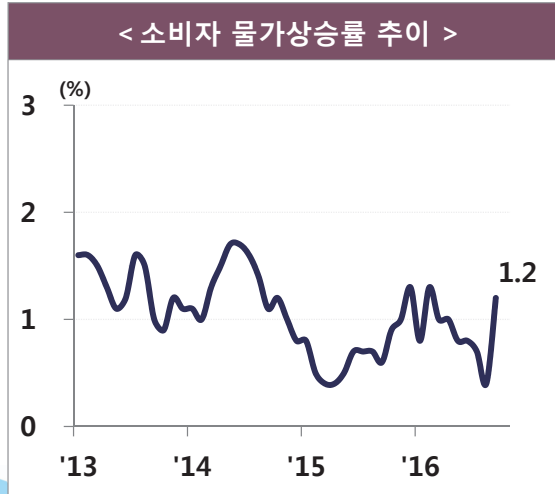
## 2 체감과 다른 저물가 현상의 원인

## 3 시사점

## 1. 문제제기

# 1. 지표는 저물가, 체감은 고물가

- 최근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물가는 높음
  - 2015년 이후 한국은행의 목표치 2%를 하회하는 낮은 물가상승률 지속
  - 그러나 민간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실제 물가지수를 상회



2

## 2. 원인

# 2-1. 대표성을 반영하는 지수물가의 한계

- 소비자물가지수는 경제 전체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반영
  - 개인들이 구입하는 품목의 종류, 구입 빈도는 다르기 때문에 대표성을 반영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는 어느 정도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의 특징 >		
	지수물가	체감물가
품목 선정	조사항목별 월평균 소비자출액이 총소비지출액의 1/10000 이상인 481개 품목의 가격변화	자신과 관련 있는 품목
평균 계산 방법	가중 평균	산술평균
구입빈도	미반영	구입 빈도 높은 품목의 가격변화에 더 민감
가격비교시점	전년동기대비	전월, 혹은 가장 가격이 저렴한 시기
기준연도의 설정	5년 주기로 개편	-
소비지출액 증가	-	가족수 증가에 따른 생활비 증가, 자녀 성장에 따른 교육비 증가 등을 물가가 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3

## 2. 원인

### 2-2. 저물가의 가게 특성별 상이한 영향

#### 1) (소득분위별 영향) 저소득가구와 고소득가구의 품목별 지출 상이

-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비, 통신비를 많이 지출
-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교통비, 오락문화비, 교육비를 많이 지출

< 소득분위별 소비지출비중(%) (2015년) >

(단위: %)	전체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식료품비·주류음료	13.8	20.0	15.6	14.3	12.9	11.3
주류·담배	1.3	1.9	1.7	1.4	1.2	0.9
의류·신발	6.3	4.6	5.8	6.3	6.4	7.0
주거·수도·광열	10.8	16.1	13.1	10.9	9.9	8.6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1	3.6	3.7	3.7	3.9	4.9
보건	6.8	10.3	7.2	6.6	6.6	5.8
교통	12.5	9.6	11.8	11.6	13.9	13.5
통신	5.8	6.4	6.7	6.2	5.6	4.9
오락·문화	5.8	4.5	5.2	5.6	5.8	6.8
교육	11.1	5.5	8.5	11.1	12.0	13.4
음식·숙박	13.2	10.7	13.1	13.6	13.6	13.6
기타상품·서비스	8.4	6.8	7.7	8.8	8.3	9.1

자료: 통계청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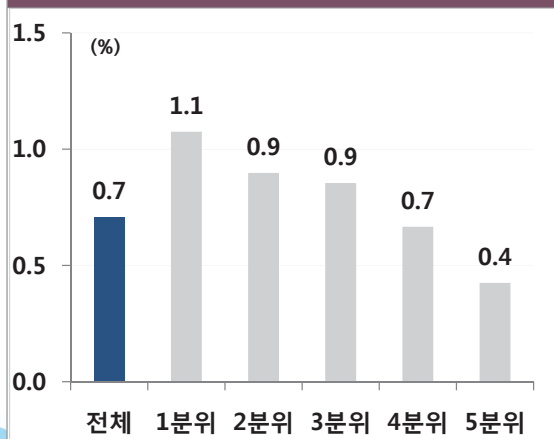
## 2. 원인

### 2-2. 저물가의 가게 특성별 상이한 영향

#### 1) (소득분위별 영향) 소득이 적을수록 저물가의 혜택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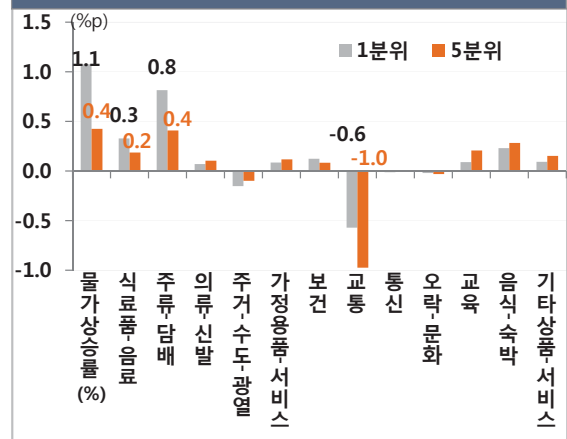
- 2015년 물가상승률은 1분위 1.1%, 5분위 0.4%로 소득분위별 격차발생
- 소득 적은 가구일수록 담배 및 식료품 물가 상승 영향을, 소득 많은 가구일수록 교통물가 하락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

<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2015년)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소득분위별 물가기여도(2015년)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5

## 2. 원인

### 2-2. 저물가의 가게 특성별 상이한 영향

#### 2) (가구원수별 영향) 가구원수에 따라 품목별 지출 상이

-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일수록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비를 많이 지출
-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통신비, 교육비를 많이 지출

< 소득분위별 소비지출비중 (2015년) >

(단위: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식료품·비주류음료	14.0	15.3	16.2	13.6	12.8	13.0
주류·담배	1.3	1.7	1.6	1.3	1.1	1.2
의류·신발	6.2	5.7	6.0	6.6	6.4	5.9
주거·수도·광열	11.8	19.4	13.7	10.9	9.3	10.3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1	3.7	4.4	4.2	4.1	3.2
보건	7.1	9.0	9.7	6.5	5.6	6.0
교통	12.4	11.0	12.4	13.2	12.4	11.6
통신	5.6	4.5	5.3	6.1	5.6	6.3
오락·문화	5.8	5.8	5.5	5.9	6.1	5.5
교육	10.0	2.1	3.7	8.9	15.4	16.4
음식·숙박	13.2	12.5	12.7	13.9	13.3	12.5
기타상품·서비스	8.5	9.1	8.8	9.0	7.9	8.0

자료: 통계청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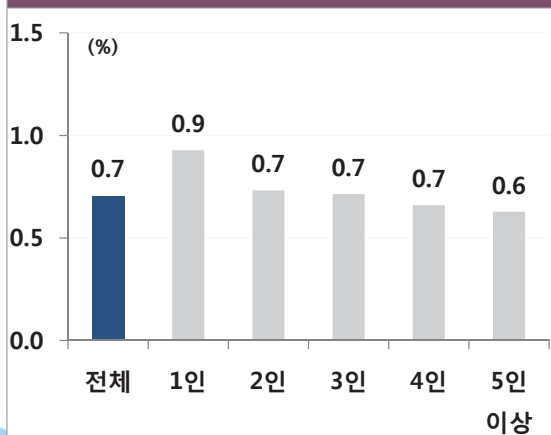
## 2. 원인

### 2-2. 저물가의 가게 특성별 상이한 영향

#### 2) (가구원수별 영향)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저물가의 혜택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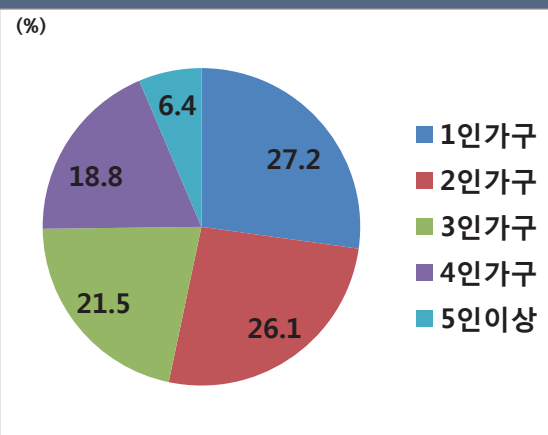
- 2015년 물가상승률은 1인가구 0.9%, 5인 이상 가구 0.6%로 가구원수별 격차발생
- 전체 가구 중 1~2인 소형 가구의 비중이 53.4%

< 가구원수별 물가상승률(2015년)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2015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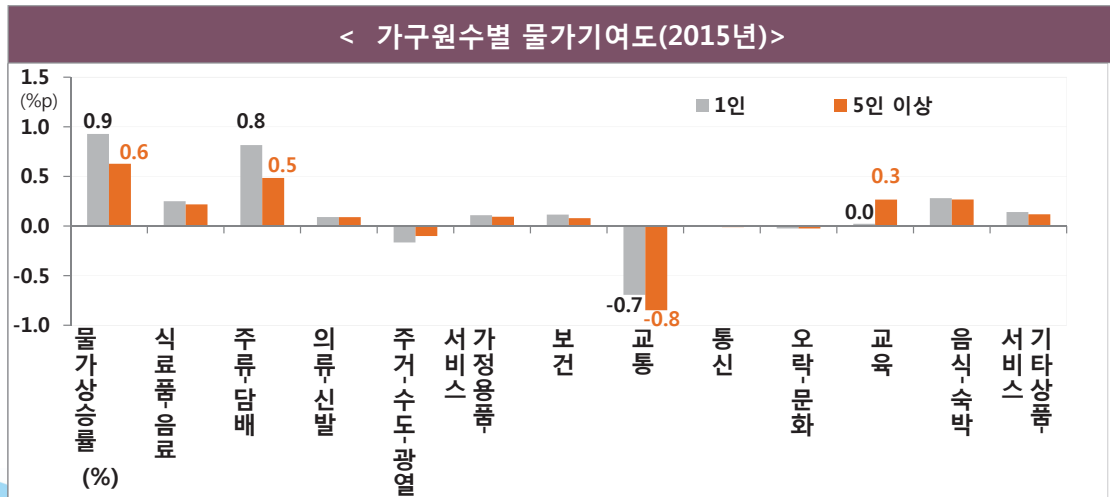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7

## 2. 원인

### 2-2. 저물가의 가게 특성별 상이한 영향

- 2) (가구원수별 영향)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저물가의 혜택 적음
  - 2015년 물가상승률은 1인가구 0.9%, 5인 이상 가구 0.6%로 가구원수별 격차발생
  - 가구원수 적은 가구일수록 담배 물가 상승 영향을 크게 받음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8

## 2. 원인

### 2-2. 저물가의 가게 특성별 상이한 영향

- 3) (가구주연령별 영향) 가구주 연령에 따라 품목별 지출 상이
  - 가구주연령 39세 이하 가구(청년가구)는 교통, 주거, 오락문화 지출비중이 높음
  - 가구주연령 60세 이상 가구(고령가구)는 식료품, 주거, 보건 지출비중이 높음

< 가구주연령별 소비지출비중(2015년) >

(단위: %)	전체평균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식료품·비주류음료	13.8	12.4	12.8	13.2	18.9
주류·담배	1.3	1.3	1.1	1.4	1.5
의류·신발	6.3	6.6	6.3	6.6	5.5
주거·수도·광열	10.8	11.3	9.2	10.7	14.1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1	4.6	3.8	3.9	4.5
보건	6.8	6.0	5.7	6.4	10.9
교통	12.5	15.0	10.9	12.5	13.2
통신	5.8	5.7	5.6	6.4	5.2
오락·문화	5.8	6.7	5.9	5.5	5.0
교육	11.1	7.7	17.9	10.0	1.6
음식·숙박	13.2	13.6	13.2	14.4	11.1
기타상품·서비스	8.4	9.0	7.7	8.9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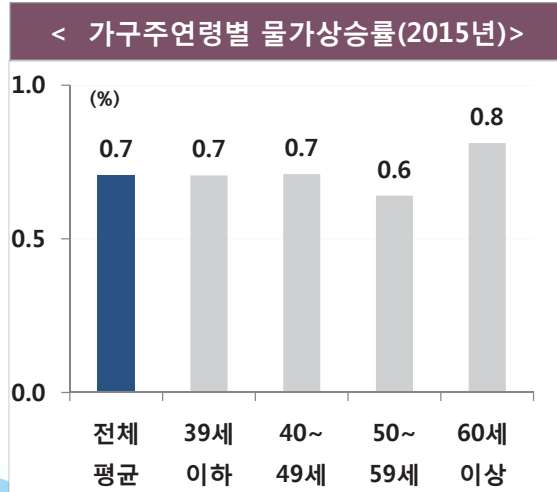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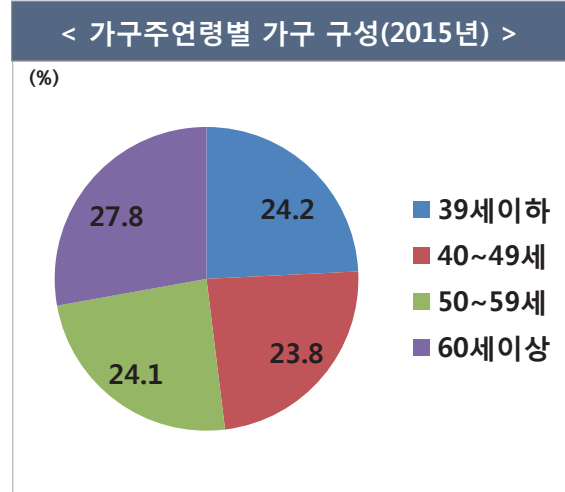
## 2. 원인

### 2-2. 저물가의 가게 특성별 상이한 영향

- 3) (가구주연령별 영향) 가구주연령이 높을수록 저물가의 혜택 적음
  - 2015년 60세 이상 고령가구가 직면하는 물가상승률이 평균 물가상승률을 상회
  - 전체 가구중 60세 이상 고령가구의 비중이 27.8%로 가장 높음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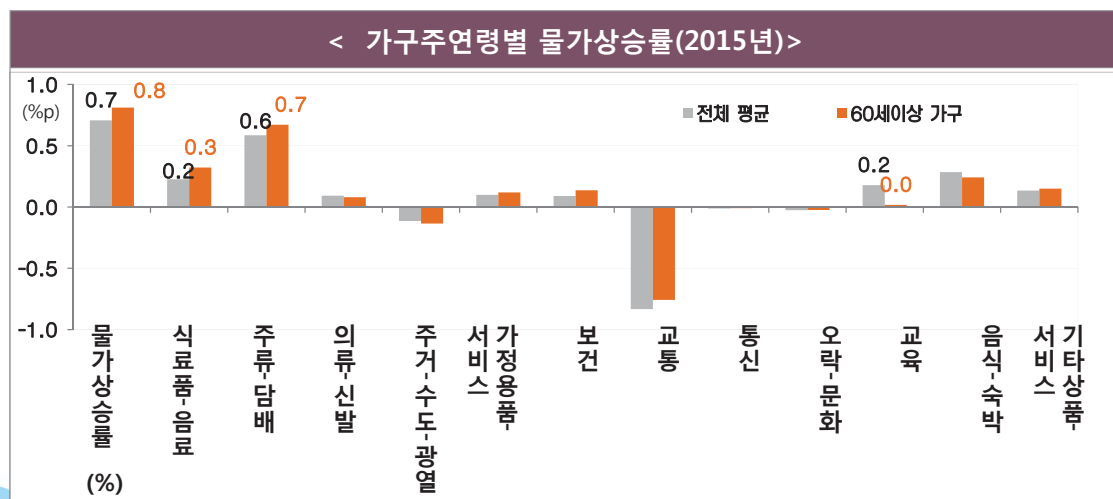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10

## 2. 원인

### 2-2. 저물가의 가게 특성별 상이한 영향

- 3) (가구주연령별 영향) 가구주연령이 높을수록 저물가의 혜택 적음
  - 60세 이상 고령가구는 식료품, 담배 물가 상승 영향을 크게 받음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11



### 3. 시사점

## 3. 시사점

- ① 저물가 혜택이 적었던 저소득층, 소형가구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료품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
- ② 교육비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중년 및 다인 가구를 위해 사교육비 책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행
- ③ 공식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의 차이에 대한 민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계 소비 특성이 반영된 보다 다양한 소비자물가지수 개발 필요



[토론]

# 지정토론



## 최재섭 교수 (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과)

- 지표로 보는 최근의 소비자물가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물가 기조를 유지
- 다만, 특정 소득분위, 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특정 집단에서는 오히려 체감 물가의 상승으로 인식할 수 있음
  - 이렇게 체감물가 상승을 인식하는 계층은 저소득층, 소형가구 등 경제적 약자인 경우임
-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정확히 반영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책이 필요

첫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

- 공공부문에서 서민계층을 배려하는 가격정책이 필요(전기요금에서 보여준 사용요금의 불합리한 산정 등을 개선하는 등)하고,
- 민간에서 효과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시장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할 필요도 있음
- 또한, 공정거래 정책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억제해야 함

둘째, 유통업계의 자율적 변화를 요망

- 현재의 공급망은 유통업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
  - 유통업계가 공급망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과실을 소비자 및 공급망을 구성하는 참여기업들과 나누지 않고 모든 이익을 독점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업계는 상생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당국은 공정거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함
- 저물가의 고착화는 거시경제적으로 또 다른 함의를 가질 수 있으므로, 정부 당국의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천규승 전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소협 물가감시센터의 서민물가 동향 발제문은 물가안정이 소득계층별 분배문제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근거하면서 시장경제의 원리로는 분배개선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일수록 고소득층에 비해 생활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임. 특히 식음료, 주거광열,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생필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

사이다, 두부, 과자, 라면 등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통한 불매운동 등으로 시장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요금은 원가 압박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함.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경우 시민 세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주거비 부담은 정책 실패 못지않게 소비자 선호에 기인하는 측면이 없지 않음. 수요가 뒷받침 되지 않는 공급자 주도의 가격 책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임. 특히 전세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거주방법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적으로 기대될 때의 자금 확보수단에 불과함.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저금리의 결과가 아니며 주택가격 불안정 시대의 불가피한 현상임.

시장지배적 사업자끼리의 가격담합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므로 담합 저지, 유통구조 안정 정책이 직접적인 물가개입 정책보다 더 필요함. 기업의 생리상 원자재 가격 하락분을 상품가격 하락으로 반영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가 시장질서 확립에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임

현대경제연구원의 저물가 현상 관련 발제문은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수준 높은 분석을 이룬 것으로 보이나 저물가가 소득 수준 또는 가구원수로 대표되는 가계 특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은 물가상승률을 소비지출 비중으로 보정한 구조적 결과이므로 저물가와 관련성이 낮음. 특히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저물가의 혜택이 적다는 지적은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수가 적고 노인 가구 비중이 높다는 가구특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음.(특히 주류 담배 영향이 크고 교통비 영향이 작다는 지적)

식료품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저소득, 소형가구만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나, 가격 정보의 공개, 가격 담합 감시 등 소비자의 압력으로 시장을 정상화 시키려는 시도는 필요할 것임. 교육비 부담 증가는 비정상적인 사교육 열풍에 기인하는 것으로 물가 대책만으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다양한 가게 특성이 반영된 물가지수 개발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판단됨.

종합적으로 논의할 때 통계적 물가보다 물가 인식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심리적 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체감 물가 상승 지적보다는 적정 소비지출 유도가 우선되어야 함. 정부의 의도적 소비 조장도 물가 부담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국민의 1/4을 차지하는 적자가구의 가게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지출은 애국이 아니라 망국의 지름길임을 당국이 인식해야 함.



## 강성경 사무총장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 □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서 머무는 저성장의 장기불황 속에 소비자 가계부담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저성장과 경기불황은 국내외의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어 향후 소비자들의 소비위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해외수출에 의존하면서 성장해왔지만 최근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감소되면서 내수시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서민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민물가안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다.

### □ 기업의 가격결정에 대한 오해

그러나 서민물가안정에 있어 소비자의 체감에 민감한 생활제품의 가격인상에만 집중되어 있고, 또한 제품의 가격인상이 기업이 경영적 손실을 만회하고자 인상된 것 같은 분석은 시장경제에서의 기업과 소비자간의 불신을 가중화할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러한 기업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가격결정에 있어 단순히 기업의 경영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원재료가격이 제품의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원재료가격 인상이나 하락의 요인보다 더욱 복잡한 구조로 결정되고 있다.

즉, 해당 제품의 원재료, 기술, 연구투자, 설비, 영업판매관리, 물류비, 노무비, 마케팅비, 세금 등 있고, 그 외의 기회비용들이 있다.

이러한 가격결정에 대한 사항의 기업의 영업상 중요한 사항으로 쉽게 공개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인상 등에 대한 기업의 해명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

가격인상에 대한 오해 중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도 단순히 마케팅적 차원의 가격인상의 전략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웰빙과 건강, 기호 선호 등 다양한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추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시장에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이다. 기존의 제품과 전혀 다른 고급원료와 품질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정도로 봐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제품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의 연구와 수 차례의 소비자 테스트 등을 걸쳐 출시되었으며, 또한 시장에서 정착을 위해 광고와 홍보, 판촉행사 등의 초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순한 원재료의 원가만을 가지고 가격 결정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 이러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0% 이하이고, 잠깐 소비자의 붐을 타다가 사라지는 제품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신제품의 시장 정착은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기에 더욱 기업의 신제품 특히 프리미엄 제품의 출시는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신중히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 □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

물가안정에 있어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생필품에 대한 가격은 서민생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오늘 발제에서 지적했던 가격 담합이나 비윤리적인 가격 인상 형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품의 가격 인상이 모두 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손실이나 과잉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좀더 신중히 봐야 할 것이다.

제품의 가격 결정은 과거와 달리 제조사에서 정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유통과정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가격은 기업의 중요한 영업상 비밀자료로써 이를 공개하기도 어렵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위함이고 시장에서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이루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유통단계)에서 지나친 가격 경쟁은 기업의 출혈 경쟁으로 중소기업들은 더욱더 시장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심지는 평생을 쌓아온 우수한 제품들이 도산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가격 결정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발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현재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생활물가지수를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물가안정에 있어 가장 힘들어하는 저소득 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시장 현실에서의 소비형태를 면밀히 살피어 저소득 서민층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들과 계층별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고려하여 함께 조사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기업들도 제품의 가격결정에 있어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경영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가격인상의 요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어찌 보면 더욱 소비자들에게 변명으로만 비춰질 수 밖에 없어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이러한 토론회를 비롯하여 보다 다양한 자연스런 소통의 장들이 마련되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비자와 정부와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도 소비자도 그리고 기업도 모두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 이재현 기자 (식품음료신문)

서민물가상승률 주범이 식품업계?

식품업계 가격 인상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 소주는 작년 11월부터 가격을 인상했고, 올 들어서도 과자, 빙과류 제품의 가격이 올랐다. 이달에는 맥주 6%와 콜라 5% 등 가격이 상승했다. 라면과 참치캔 등도 인상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인데, 막상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2%대 이상에 달해 차이가 크다. 그렇다면 정말 식품기업이 서민물가에 부담을 주는 주범일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로, 필요 시 가격을 인상할 수 있지만 원부자재·인건비·유틸리티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가격인상을 단행한다.

이중에서도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꼽는 것은 원재료값 폭등이다. 최근 배추, 무, 고춧가루 등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채소 가격이 전년과 비교해 2배 넘게 올랐다. 본격적인 김장철인 11월 말~12월 초에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처럼 농산물은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10.3% 상승했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6.1%, 5.3% 오르며 전체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가공식품 주재료인 농산물은 가격 변동 부침이 심하다. 가뭄이나 태풍 등 날씨를 포함한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 실패 또는 유통구조 문제 등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작 물가상승률의 원흉으로 제조업체가 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조업체에서 가격인상을 결정하는 데에는 단순히 단기적인 원재료 가격인상을 놓고 결정하기 보다는 가격 등락의 지속 여부와 외부 요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격인상을 단행하되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선에서 진행한다. 실제 농산물 가격이 10% 이상 상승해도 가공식품 인상폭은 단 자리 수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게다가 가공식품 가격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탕이나 밀가루 등 소재성 식품은 원재료 시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격이 운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조업체의 가공식품 가격인상은 정작 대형마트 등 유통시장에서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출고가는 인상됐지만 대형마트 입점 시 할인, 기획상품 등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할인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들에게 질타만 받고 큰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왜 이익도 없는 가격인상을 단행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제조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윤을 남겨야 더욱 더 투자를 하고 그만큼 새로운 제품들도 탄생하며, 기존 제품들도 맛과 품질도 업그레이드되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최근 식품업계의 잇따른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정국이 불안한 시기에 기습적인 가격 조율은 시기와 방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공식품은 우리들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식품은 아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소비자 스스로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인데, 이들 제품의 가격인상이 서민물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업계에서도 쉽게 가격 인상은 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무조건적인 식품업계 가격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김순복 사무처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는 高물가로 고통 받고 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低물가로 발표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어, 체감률을 떨어뜨리는 물가지수는 정보로서의 효용성도 떨어질 수 있어

지난 11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대비 1.3% 올랐고 최근 물가 상승률 중 최고치라고 (8월 0.4%, 9월 1.2%)하였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체감물가는 5%~15%를 상회하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는 0%~1%대라고 하니 소비자에게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 여름 올라간 배추값(전년 동월대비 143.6%)이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무도 전년 동월 대비 139.7% 높은 가격으로, 신선식품지수가 작년보다 15.4% 올랐다고 한다. 농산물 10.3%, 축산물 6.1%, 수산물 5.3%가 전년 동월보다 올랐다고 한다. 매일 먹고 마시는 생필품은 계속 오르는데 저물가라고 하니 공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조사방법과 제외 품목, 가중치 부여 등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원리가 부여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의 소비자는 저성장의 경제 불황속에서 저소득, 가계부채 급증과 고물가라는 3,4중고를 겪고 있는데, 정부 자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존한 “저물가”가 지속된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서민 소비자가 공감하기는 어렵다.

저소득의 힘든 현실은 지난 통계청의 최근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주제로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1946만7000명 중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은 45.8%인 891만5800명에 달했으며,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100만원을 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10명 중 1명 꼴인 전체의 11.2%를 차지했다. 이어 100만~200만원 미만은 34.6%를 차지했다.

오늘 소협 발제자료 부제목이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의 물가 진단 및 대책마련이라고 했는데, 서민(庶民)이란 사전적으로는 경제적 생활이 중류이하의 넉넉지 못한 계층을 의미한다. 중류이하의 중산층 이하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저소득층이라는 개념과 닿게 된다.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高물가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가 두 번째 발제자인 현대경제연구원의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소득이 적은 가구(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비, 통신비를 많이 지출하고 담배와 식료품 물가상승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주류와 담배의 물가상승 영향을 많이 받고,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식료품, 주거, 보건비 영향을 많이 받고, 저물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구성원의 변화 특성과 고물가 품목이 일치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물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계층 역시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령사회와 1인가구의 증가, 생계형 가계부채 급증과 하위 소득층의 부채비율 급증 등 이러한 계층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이 모두 최근 고공으로 가격이 상승한 품목들이라는 점, 그래서 사회 대다수 계층을 형성하는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고물가로 더욱 어렵다는 점이다. 저물가를 체감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저물가로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속에 감춰진, 서민들이 고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원인 및 배경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소득의 양극화(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 고소득과 저소득층의 양극화 심화, 근로소득자 45.8%가 월평균 200만원 이하의 소득
- 가계부채 급증, 가계부채 1,200조 시대, 비은행권 생계대출이 급증하고, 소득하위 10%의 부채비율이 소득 상위10%의 부채비율보다 월등히 높아.
-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식료품비,주거비,보건비,통신비를 많이 지출하고 저소득일수록 담배 및 식료품 물가 상승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은 고물가를 체감할 수밖에 없어

### 2. 고령화 사회 (전체 가구중 27.8%가 65세이상 고령)

- 고령 가구의 식료품,주거비, 보건비 지출비중 늘어
- 식료품, 주거비는 대표적인 상승률이 큰 품목으로 저물가의 혜택 못받아

### 3. 소형가구 (1~2인 가구) 증가

- 소형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 1인 가구의 물가상승률이 타가구보다 월등히 높아
- 소형가구일수록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비를 많이 지출해, 물가상승률이 큰 품목에 대한 지출이 높아

### 4. 불확실한 환경 (기후변화의 시대)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온으로 폭염, 폭서 영향 받아
- 전기요금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 식료품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폭등, 서민 물가에 직접적 영향.



→ 이러한 배경 아래 대다수 서민 소비자는 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데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저물가”는 현실과의 괴리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해 저물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생산됨으로써 정책 당국에서는 고물가로 고통 받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되고, 소비자는 더 이상 물가와 관련한 정책을 기대하거나 신뢰하지도 않게 된다.

체감률이 떨어지는 물가지수의 문제점은 이처럼 정보로서의 가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정책 당국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특정 품목에 나타나는 고물가 제품에 대한 저항성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11월1일)부터, 맥주와 음료 인상이 발표되었으며, 각종 과자,라면 등 각종 생필품류가 올해 최소 5%~16% 인상되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0%대로, 업체들의 비합리적 인상을 저항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생필품 등에 대한 세분화된 물가동향 및 물가지수 개발을 통해 체감 물가를 발표하고, 비합리적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고물가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서 발제자들이 제안한 과점시장구조 해소 노력과 기업의 자발적인 가격인하 노력, 유통마진의 절감 등에 공감하며, 공식지수물가와 체감물가 차이에 대한 괴리감을 좁히기 위한 가계 소비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소비자물가지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

특히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시장의 체감 물가를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는 소비자 단체 입장에서 통계청 등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소비자 체감 물가 정보제공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양한 계층의 물가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가 소외된 물가지수가 아닌, 소비자가 체감하여 가계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했으면 한다.

(소비자 물가)민·관·연 거버넌스(가칭)에서는 다양한 계층별, 품목 유형별 공감할 수 있는 물가조사법을 개발하고, 조사 및 발표를 한다. 이는 기존에 이루어지는 조사의 중복성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식비 물가 동향, 수험생 부모를 위한 학원 교습소 물가동향, 영유아 자녀를 둔 계층을 위한 영유아제품 물가 동향, 공공요금 물가 동향, 교통비 물가 동향 등등, 다양한 계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가계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체계를 만들기를 제안한다.

체감할 수 있는 물가 동향의 정보제공을 통해 비합리적인 꿈수 인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소비자들의 모습을 즉시 보여주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소비자도 기업을 판단하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